

양승태 재판... 법원은 '고민 중'

사법농단 주도 혐의로 기소... 인사 이동·사무 분담 재판부는 제외될 듯

'사법 농단' 의혹을 주도한 혐의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법원장이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할지 주목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하고 배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에서는 전직 사법부 수장을 피고인석에 앉혀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어느 재판부가 심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법원은 원칙적으로 연고 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으로 사건을 배당한다는데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 인사 이동과 사무분담이 예정된 재판부는 형사합의부 재판

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이 배당된 뒤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맞춤형 재판부를 꾸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35·36부 중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재판부 3곳을 증설한 바 있다. 신설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기존 재판부보다 사건 부담이 적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직접적인 연고 관계도 없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미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

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 등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5명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께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관련 기록 열람등사 및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사건도 기소 후 28일이 지나서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겹치는 공소사실이 많아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으로 나눠왔다가 양 전 대법원장으로 다시 합쳐지는 모양새로 파악했다.

반면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한 재판부가 과도한 업무량을 부담하게 돼

병합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한 사람의 혐의만 수만쪽인데 두 사건을 같이 담당하면 업무량이 부담되기 때문에 (병합)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시 추가기소된 임 전 차장 사건은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았지만, 임 전 차장이 관사 후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며 조만간 첫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24일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뉴시스

국민 10명 중 6명 "북미정상회담 성과 있을 것"

리얼미터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오는 27~28일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8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응답률 5.7%)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전망'을 묻는 국민 여론을 조사했다.

이 결과 북핵 문제 해결 등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답변이 62.5%로 북한의 비핵화 등 구체적인 결과물 없이 '한미동맹만 약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 답변은 35.1%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큰 성과가 있을 것'이란 답변은 25.3%,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란 답변은 37.2%였다. 반면 '별로 성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20.8%, '전혀 성과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14.3%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2.4%로 집계됐다.

대부분 진보 및 중도층,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 등

모두 긍정적 전망이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당 지지층 및 보수층에서만 부정적 전망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60대 이상 및 무당층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팽팽한 구도를 띠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에서 긍정적 전망 비율이 높았다. 40대는 72.7%가 긍정, 27.3%가 부정전망을 내놓았고 30대 역시 각각 70.7%와 29.3%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이 긍정 81.9%, 부정 18.1%로 집계됐고 중도층은 각각 66.2%와 33.8%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긍정이 43.5%, 부정이 54.2%로 반대 구도를 그렸다. 무당층에서도 긍정 44.5%, 부정 48.3%로 대립각을 세웠다.

지지정당별 구분에서는 정의당 지지층의 긍정전망 답변이 93.6%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긍정이 92.8%, 부정이 6.2%였고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긍정이 65.2%, 부정이 34.8%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전망이 22.8%, 부정전망은 73.8%로 집계됐다. /뉴시스

여야 4당, '5·18 민주화운동 폄훼' 맹공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홍영표 민주 원내대표 "역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여야 4당은 11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폄훼한 데 대해 "맹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주최하고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함께 문제의 발언을 쏟아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5·18 일정으로 방미에 나선 이해찬 대표의 입장을 대독해 "5·18에 대한 망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5·18 진상규명 공청회가 아니라 5·18 모독회였다"며 "발표자의 천인공노할 망언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당

이라면 세 의원의 망동에 대해 당사국인 앞에 사과하고, 출당조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5·18 관련 범죄적 망언을 어쩔 줄 모르겠다는 것 같다"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이라 했지만 망언한 의원들의 징계에 대해서만 입을 닫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안은 유감 표명으로 끝낼 수 없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우리 국민이 이룬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야 한다"며 "우리 당은 야당과 공조를 통해 범죄적 망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순화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한국당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만원씨의 거짓 주장을 방조한 것도 모자라 현직 의원들이 망언을 쏟아냈다"고 성토했다.

이어 "5·18 광주학살 참극은 우리 역사의 비극으로 또 다른 면에서 5·18 광주정신은 민주주의 역사의 커다란 자부심으로 목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당은 적당한 변명 속에 그대로 넘겨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달리 할 수 있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세는 한국당의 역사적 인식, 그리고 보수세력의 현재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역사 왜곡을 폄훼하는 일을 국회 차원에서 그대로 놔둘 수 없다. 국회 윤리위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은 주말인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고소·고발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3당과 협의해 세 의원의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며 "5·18 단체, 유가족, 국민들과 연대



5.18 망언 의원직 사퇴하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의원들이 5.18 망언, 역사부정, 한국당은 사죄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지도부도 이제 국민에게 명확한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도부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공당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5·18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 출당 등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의 후예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주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해당 의원들과 지도부

를 규탄하고 나섰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광주 항쟁을 모독하고 유족과 광주 전남 시민에게 정치적 패륜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나 원내대표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무슨 망발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라면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고 출당 시키며 야당이 추진하는 의원 제명절차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뉴시스

靑 "5·18 역사·법적 판단 끝... '괴물집단' 발언 국민합의 위반"

청와대는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괴물집단'이라고 해 파문을 일으킨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을 내렸다"며 "5·18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들이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